

“공정거래법 제60조 개정해야”

손금주·최명길 의원 주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토론회

송재일 교수 “사문화된 법조항,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보장해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6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즉,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혜택을 협동조합에 부여하고, 공동사업을 보장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손금주·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주관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 제60조를 개정해 협동조합을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자주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엄격히 규제해 조합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답합에 대한 정책은 엄격하지만 예외적 인정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공정거래법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인

만큼 개정부담이 크지만 타 협동조합과 연대하거나 사회적경제 법안을 논의 중인 입법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고 송 교수는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 공정거래법 제60조의 규정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된다면 간주조합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상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조항은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협동조합에 불리해 거의 모든 행위를 억제하고 있다”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의 순기능이 극대화돼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공정거래를 지향하고, 민주적·효율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근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공정거래법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19조 2항 등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다만 문제

가 되는 것은 적용하는 방식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라며 “법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쉽지 않은 만큼 공정거래법을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무진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 사업역량 등이 부족해 법에서도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동사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은 “1961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협동조합 공동사업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까다로운 법리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원칙 등에 가로막혀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일 기자 yunji@



장병완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무등록시공자 처벌규정 강화 골자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민회의당)이 무등록시공자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무등록시공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현행 처벌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화를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무등록시공자의 처벌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합병 무효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등록시공자와 동일한 처분을 부과해 합병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3종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동시에·도지사법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진시현 기자 jinsh@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 되나

감사원 감사·채용 비위 적발 공공기관장에 사퇴 요구

가스공사 사장 공모 시작

정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위가 적발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규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정용민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부 산하 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이거나 사실상 공석인 기관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다.

여기에 임수경 한전KDN 사장(10월 20일), 이석순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10월 24일),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11월 13일), 김익환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10월 7일),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11월 1일),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10월 26일),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11월 12일), 김재홍 코트라 사장(12월 30일) 등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중 가스공사가 11일 가장 먼저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접수 마감이지만, 과거처럼 누가 낙점됐는지 하는 식의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부 차관 또는 1급 출신 인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의외의 인물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서발전도 지난달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기로 의결했지만, 아직 공모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는 있지만, 아직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발전사와 동시에 공모절차를 진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들 중심으로 소폭의 교체에 예상해 왔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전 장관의 보은인사나 비위 사실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교체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도 육식을 가리기 위해 그동안 감사원 감

주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장 임기

이름	기관명	임기(현황)
김익환	한국광해관리공단	2017년 10월
임수경	한전KDN	2017년 10월
이석순	한국가스기술공사	2017년 10월
유상희	전력거래소	2017년 11월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년 11월
함승희	강원랜드	2017년 11월
김재홍	코트라	2017년 12월
조원익	한국전력공사	2018년 3월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2019년 1월
윤종근	한국남부발전	2019년 1월
김경래	한국석유공사	2019년 2월
김정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019년 7월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2019년 11월
이관성	한국수력원자력	2019년 11월
정하영	한국서부발전	2019년 11월
정재훈	한국남동발전	2019년 11월
정희연	한전KPS	2020년 1월

사와 총리실 조사 등을 통해 기관별 경영실태 등을 파악해왔다.

그 결과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용민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은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외에도 청와대는 총리실 조사와 자체 감찰 등을 통해 입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기관장들의 비위 사실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정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적폐인사를 가린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표적수사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공기업 사장 출신 인사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갖가지 외압과 의혹으로 검찰수사까지 받고 시장에서 물러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재판에서 승소하는 걸 보면 정부가 CEO 교체를 명분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부터 공기업 사장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철저히 검증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공기업 사장직을 정치인들이나 캠프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위한 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형성 기자 azar76@

전기에너지신사업·EV충전인프라 ‘트렌드 엿보기’

전기진흥회·전력연·전력기반기술연, 전기기술세미나 3종 개최

전기에너지 신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에 대한 트렌드와 시장 동향, 사업전략 등을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전 전력연구원, 전력기반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 플러스’ 전시회 부대행사로 ‘전기에너지 신사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전략 세미나’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사업동향 및 기술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진흥회와 전력기반기술연구원은 같은 날 ‘태양광발전시스템 안전성과 수익성 극대화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기진흥회, 전력연구원, 전력기반기술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에너지 기술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과제 등을 집중 조망할 계획이다.

특히 산·학·연·민의 기술교류와 국내외 기술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4차 전력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술혁신에 관한 최신 정보, 전기차 충전인프라, 태양광발전시스템 기술 등에 대한 실제적 지식과 기술

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먼저 전기에너지 신사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전략 세미나에서는 한전의 ‘KEPCO 4.0 추진방안’을 비롯해 두산중공업, 전력연구원, LS산전, 한영회계법인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이크로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해 조망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사업동향 및 기술세미나에서는 한전, 전기연구원, 르노삼성자동차, 자동차 부품연구원, 스마트그리드협회, 전력연구원 전문가들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개발동향, 충전인프라 사업추진 계획, 표준화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안전성과 수익성 극대화 기술세미나에서는 이준규(파워포인트 엔씨), 강창원(에스디테크놀로지) 기술자들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계·시공·감리 안전성 강화 기술과 효율극대화 점검기법, 유지관리기술,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해당 세미나는 모두 유료로, 사전등록시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신청·문의: 070-4048-5984)

김병일 기자 kube@

서일전선이 생산한 친환경인증 전선 HFIX 부드럽고 시공이 편리합니다.

HFIX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우레탄 절연전선



SEOIL 서일전선주식회사



www.seoilcable.co.kr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 762번길 15
TEL 031.866.401 FAX 031.866.9827

